

항공참사특위, 활동 본격화... “진상규명·피해구제 총력”

위원장·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
내일 피해자 가족대표단과 간담회
국도위,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처리
허위사실 유포 등 엄중 조치 요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 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항공참사특위)가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항공참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소위 소속 위원 수는 각 7인으로 하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김은혜 의원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수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권영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특별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

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 전에 여객기 특위가 구성돼서 추모와 위로의 출발이 됐다는 생각”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시선으로 이번 특위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에서 고인을 기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나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고 생각한다. 소위원장으로셔야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수진 의원은 “참사 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지 엄두는 내기 어려웠다”며 “합동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의 말을 듣겠지만 이를 경청하고 특위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개최하고 법안 제정,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월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8일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도위는 지난 14일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제안과 함께 그날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 대표단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있었다.

결의안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등을 핵심 골자로 담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오늘 野와 협상

본회의 일정 맞춰 오늘 당론 발의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담 예정
野 “밤 새우더라도 협의 준비 돼 있어”
내부결속용·내란세력 보호법 지적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던 중 고개를 떨구고 있다. /뉴스시

국민의힘이 16일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며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의원 108명 전원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의 이념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것이 바로 특검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협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

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님께서 동의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체포 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처지를 토로하며 울먹였다.

국민의힘은 원래 특검법안을 발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발생하면 야당의 특검안이 통과될 수 있음을 우려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쟁용 특검을 철회하고 특

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 출발점은 우리 당이 마련한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과 면담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특검법은 내일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법안이 오전에 발의되면 특검법안의 협상과 협의를 위해 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내일 (17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2차 내란특검법안은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도 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은 밤 새우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종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당론 결정에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은 내란선동죄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추가, 수사인력·수사기간도 줄이겠다 한다”면서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의 특검법은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란동조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중으로 당장 발의하라”며 “그것이 국민에게 석고 대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탄핵심판 끝날 때까지 ‘尹 손질’ 어려워

강성 지지층, 당내 목소리 커
배신자 프레임 피하려는 움직임

날(15일)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사법 쿠데타” “명백한 법치농단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와 국수본, 법원 등 윤 대통령 체포에 관여한 수사·사법기관을 “민주당의 사병집단” “이재명 세력의 찬탈도구”라고 불렀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이

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해온 데는 현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특검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야당 배후설”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국민 여론도 탄핵 인용이 다수인 상황이다. 이럴 경우 현재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배신자 프레임’이 당내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당내에서 목소리가 큰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태도를 바꾸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결별을 선택하면, 당내 목소리가 큰 강성 지지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

힘 지지율도 윤 대통령과의 ‘손질’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도 보인다. 게다가 12·3 계엄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결별 준비를 시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했다. 야권의 ‘내란·외환특검법’이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만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서예진 기자 syj@